

정부, 年末까지 접수연장

挺身隊 피해 390명 신고

來週 보고서 작성, 日에 조치 촉구키로

1992. 07. 04

정부는 3일 지난 1월 24일 구성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日帝때의 초·중·고교의 학점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학교생 2백44명, 고교생 근로정신대 1명 등 2백45명이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주안에 日本 정부의 자체조사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료들과 종합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학계인사들의 견해를 거친 뒤 정확한 진상을 규명, 日本측의 심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의 운영사항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런, 시행키로 했다.

〈관계기사 2면〉

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 번 사기진작조치는 정부가 강조해왔던 非暴力원리에 대한 엄벌주의 修正만으로

연하

진노를 할한다』는 규정의 명목으로 있다.

정신대 피해 3백90건 접수

1992. 07. 04

지난 2월25일부터 6월25일까지 4개월간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신고한 일제 때의 정신대 피해사태가 모두 3백9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무부는 3일 "신고건수 가운데 근로정신대가 2백35명, 중군 위안부가 1백55명이며, 생존자는 근로정신대가 1백39명, 중군위안부가 74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挺身隊 피해 3百90명 신고

政府, 내달 중합보고서 내기로

정부는 挺身隊 被害 3百90명 신고

고 접수창구에 신고한 사신

신대문제실무대책반은 3일 이 가운데 생존자는 근로정신대 1백39명, 중군위안부 74명 등 2백13명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日 挺身隊 390명 신고

1992. 07. 03

중앙 백55명은 慰安婦로 年末까지 연장접수

日帝에서 끌려간 韓國 여성 挺身隊 중 정부에 신고한 사할인 중 위안부 1백55명과 근로정신대 2백35명을 합쳐 모두 3백90명이란 고교생 두 명이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개월에 걸쳐 挺身隊 피해자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중 생존자는 근로정신대 출신 1백39명, 위안부 출신 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金錫友亞洲국장장은 "이처럼 신고 숫자가 적은 것은 사안의 성격상 피해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생존했다 해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고 한 숫자만으로는 실제 끌려간 韓國人 여성의 숫자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교생 수가 늘었다. 또 고교생 수가 늘었다. 또 고교생 수가 늘었다.

이들은 6개 부처가 조사에 참여했다고 전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학계, 언론의 입장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신대 피해 신고를 계속 접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 방법이나 자료들을 토대로 8월 중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